

KREI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익식 외 26인



**KREI**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의식 외 26인



## 연구 담당

---

<b>황의식</b>   부원장   연구 총괄	<b>정은미</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국승용</b>   선임연구위원   제3장 집필	<b>정학균</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김연중</b>   선임연구위원   제3장 집필	<b>황윤재</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박준기</b>   선임연구위원   제3장 집필	<b>여인홍</b>   초빙연구위원   제2장 집필
<b>이용선</b>   선임연구위원   제3장 집필	<b>김현중</b>   부연구위원   제3장 집필
<b>김미복</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박미성</b>   부연구위원   제3장 집필
<b>김용렬</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임영아</b>   부연구위원   제3장 집필
<b>김정섭</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정도채</b>   부연구위원   제3장 집필
<b>박지연</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조승연</b>   부연구위원   제2장 집필
<b>서대석</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허정희</b>   부연구위원   제2장 집필
<b>성주인</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이정민</b>   전문연구위원   제2장 집필
<b>심재현</b>   연구위원   제3장 집필	<b>우성휘</b>   연구위원   제2장 집필
<b>우병준</b>   연구위원   제2장 집필	<b>한태녕</b>   주무원   자료조사 및 정리
<b>이명기</b>   연구위원   제1, 3장 집필	

기타연구보고 M163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홍보(주)

I S B N | 979-11-6149-382-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긴급하게 출범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농정비전과 과제 설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출범 초기에는 긴급한 농정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쌀값 안정화 등에서 현안 대응 성과가 있었던 반면, 농산물 가격폭락,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계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지체되고 있으며,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향후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과거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심 농정을 추진해왔으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노출하였다. 따라서 경쟁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포용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농정 여건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혁신적 포용 국가)에 부합하는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양한 농정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원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정부의 농정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홍상



최근 농정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인구절벽, 저성장, 지속 가능성 강조, 4차 산업혁명, 다양한 가치 지향, 국제정세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통합적 먹거리 시스템 부재, 환경적 성과 악화, 농업 성장 정체,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저하, 지역 맞춤형 농정 추진 요구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성장·생산 중심 농정 기조에서 벗어나 다원적 가치, 안전한 농식품 생산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농정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정비전을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제안하였다. 농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농정 방향은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추진체계 개편’으로 설정하였다.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달성을 위해 공익직불제 전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로운 성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급 관리, 스마트 농업 확산, 식품산업 활력 제고가 요구된다.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을 위해서는 계획적 농촌공간정책 제도화, 자립적 농촌생활권 구현,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촌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정의 지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농업·농촌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 통합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으로 농정 추진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농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농정 방향	정책과제	세부과제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공익직불제 전환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내 경제 선순환 구조 확산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국가단위 계획 수립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자율적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확산
		환경·인간·동물 친화적 축산업 육성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급 관리	생산·유통·소비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강화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혁신 성장을 위한 R&D 강화, 스마트 농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 활력 제고	4대 新식품 분야 육성을 통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과 식품산업 상생을 위한 연계 강화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계획적 농촌공간정책 제도화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한 체계적 농촌공간 관리
	자립적 농촌 생활권 구현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농촌 정주생활권 확충
		4도3촌 정주수요 대응, 다지역 거주기반 조성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 활동 촉진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농촌의 신성장 동력 창출	주민주도형·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경제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산업 고도화		
추진체계 개편	농정의 지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농업·농촌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	
	통합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6

**제2장 농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농정비전**

1. 농정 여건 변화 ..... 9  
 2. 새로운 농정비전과 추진 방향 ..... 16

**제3장 세부 정책과제**

1.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 23  
 2.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 34  
 3.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 44  
 4. 추진체계 개편 ..... 55

**부록**

2020년 정책과제 제안(안) ..... 59

**참고문헌** ..... 61

## 표/그림 차례

### 제2장

〈표 2-1〉 농정 방향과 정책과제 .....	18
〈그림 2-1〉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20

### 제3장

〈그림 3-1〉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안 .....	45
---------------------------------	----

제1장

연구 개요





# 1

## 연구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긴급하게 출범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농정비전과 과제 설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출범 초기에는 긴급한 농정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따라 쌀값 안정화 등에서 현안 대응 성과가 있었던 반면, 농산물 가격폭락,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계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또한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지체되었으며,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향후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농업·농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국정 비전(혁신적 포용 국가)에 입각한 올바른 농정 방향 설정과 흔들림 없는 추진, 농정의 정당성

확보와 우선순위 재설정, 정책 간 연계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지난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심 농정을 추진했으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노출하였음.

-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업 실질 생산액, 농가·농업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성과가 미흡하였음.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도 농가소득 양극화, 농촌 공동체 축소, 환경오염, 먹거리 불안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 부문 생산성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투입재 가격 상승은 불충분한 농업소득과 민간투자 위축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다시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제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김홍상 외 2017).

- 농가 간 불평등 심화, 도농 간 정주여건 차이 심화, 과소화·공동화 등 농촌 지역경제·공동체의 활력 저하, 농촌 근교 난개발·환경오염 등으로 농촌다움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음. 또한 안심·안전·질 높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통합적 접근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경쟁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포용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농정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농촌의 불평등 및 취약성을 해소하고 삶의 질 최소 기준 충족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며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등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함.

##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최근 농정 여건과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최근 농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비전을 제안함.
-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안한 농정비전에 따른 세부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2.2. 연구방법

- 농정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정비전과 기본 틀을 설정하고, 원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용을 확정함.
  - 이 일환으로 2019년 11월 26일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분야별 원내 전문가가 새로운 농정비전을 반영한 세부 정책과제 원고를 작성하고, 관련 연구진들 간 협의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음.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개별 농정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거나 이미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농업·농촌·식품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접근방식을 택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음.

- 김병률 외(2017)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제시한 뒤, 분야별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
- 김홍상 외(2017)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 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여건 변화 분석, 기존 정책 검토 및 평가 등을 통해 농정 분야별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음.
- 이명기 외(2017)는 OECD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 부문의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농식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농업·농촌을 둘러싼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혁신적 포용 국가)이 제시되는 등<sup>1)</sup> 농정은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최근 농정 여건과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정비전 및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됨.

---

1) 혁신적 포용국가 웹페이지. <<http://www.inclusivekorea.go.kr/>>. 검색일: 2019. 12. 15.

## 제2장

# 농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농정비전





# 2

## 농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농정비전

### 1. 농정 여건 변화

#### 1.1. 외적 여건

##### 1.1.1. 인구절벽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지속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였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고령화율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농촌 고령화율은 2018년 21.5%로 조사돼 도시(12.8%)<sup>2)</sup>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통계청 인구총조사). 따라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신규 인력 확보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동시에 고령층이 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sup>2)</sup> 농촌은 읍·면부를, 도시는 동부를 기준으로 함.

### 1.1.2. 저성장

-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는 등 저성장에 직면하면서<sup>3)</sup> 부의 양극화 심화와 함께 정의, 공정성 가치의 중요성이 커짐.
  - 도농 및 산업 부문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시각이 필요함.
  - 한편, 농업·농촌은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 관련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함.

### 1.1.3.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은 환경성과 안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형평성,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도 식량안보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등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sup>4)</sup>
  - UN은 기후변화 대응 등 기존 과제 외에도 물-에너지-식량 연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 등을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제시함.

### 1.1.4. 4차 산업혁명

- 미래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전 산업 분야와 융합 되어 경제·사회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유발할 것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경쟁력과 농촌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도농 간 디지털 복지 격차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sup>3)</sup> 2019년 2, 3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 2.0%로 발표되었음(한국은행, <http://bok.or.kr>, 검색일: 2019. 12. 1.).

<sup>4)</sup> UN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검색일: 2019. 11. 20.)

### 1.1.5. 다양한 가치 지향

- 현대인들은 소득 외에도 참여, 공동체,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농업·농촌은 치유, 문화·여가, 휴양 및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산업이자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충해 나가야 함.

### 1.1.6. 국제정세 불안정

- 미·중 신패권주의 갈등 심화,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농업인이 갖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1.2. 내적 여건

### 1.2.1. 통합적 먹거리 접근 시스템 부재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안심·안전·질 높은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통합적 접근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취약계층에 대한 질 좋은 먹거리 보장, 지역 공동체 기반 먹거리 시스템, 건강한 먹거리 소비 등 지속가능한 도시·농촌 구현이 필요함.

### 1.2.2. 환경적 성과 악화

- 정부는 1995년 UR/WTO 출범을 계기로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을 목표로 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 시작했음. 그 결과, 대규모 시설 투자·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가축질병 발생, 토양오염 등으로 환경적 성과는 악화되었음.

\* 2015년 한국 질소 수지는 221.87kg/ha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인 수지는 46.3kg/ha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sup>5)</sup>

### 1.2.3. 농업 성장 정체

○ 전면적 시장 개방 확대에 의한 농가 교역 조건 악화는 농업 소득 정체, 신규 투자·인력 유입 저해 등 악순환을 초래함.

- 농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농가 평균 소득은 소폭 상승 추세이나, 품목별·규모별 농가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었음.

\* 농업 생산액 증가율은 1990년대 5.1%, 2000년대 3.5%, 2010년대 1.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농림업생산지수). 농가 소득은 2010~2018년 동안 연평균 3.4% 성장했고 2018년에는 4,200만 원을 초과하였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2013~2017년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은 도시 가구보다 약 2.4~3.4배 높고, 농가 유형 간 격차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유찬희·김태후 2018).

### 1.2.4.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저하

○ 고령화, 과소화·공동화 등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농촌 근교 난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농촌다움 유지가 어려워짐.

\* 2018년 농업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비율은 70세 이상이 44.3%, 40세 미만이 0.7%로 나타났음(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1.2.5. 지역 맞춤형 농정 추진 요구 증대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역 특성 맞춤형 농정 추진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 농정 역량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

<sup>5)</sup> OECD Data. <<https://data.oecd.org/agrland/nutrient-balance.htm>>. 검색일: 2019. 11. 30.

### 1.3. 주요 선진국 농정개혁 방향

- 주요 선진국 농정을 살펴보면 성장·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특히 농업이 창출하는 다원적 가치와 안전한 식품 공급, 소득원 다각화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중시하고 혁신과 포용,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1.3.1. 일본

- 일본 農林水産省(2015)은 제4차 식품·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하고 공격적인 농업”과 “아름답고 활기찬 농촌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과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시행 촉진을 위한 지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새로운 융복합을 촉진하고, 가치사슬을 강조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다기능 지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합과 소통을 통한 공동체 기능 유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농림수산 연구 혁신 전략」 수립(農林水産省 2019)을 통해 세계시장 확보와 과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품’, ‘스마트 푸드 체인’, ‘육종’, ‘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4가지 분야에 대해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음.

### 1.3.2. 미국

○ 미국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전략계획 2018-2022」를 수립하고 7개 주요 농정 목표를 제시하였음(USDA 2018).

- 전략목표1: 청렴성과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정책 사업들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
- 전략목표2: 세계 식량 공급을 통해 농업인 능력을 극대화
- 전략목표3: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촉진
- 전략목표4: 농촌을 번영시키고, 경제 개발을 활성화
- 전략목표5: 최신 기술과 연구를 통해 사유지 관리를 강화
- 전략목표6: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용
- 전략목표7: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식품 공급

### 1.3.3.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1996년 코크 선언(1996 Cork Declaration)을 통해 농정의 기본이념을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고 농정 목표를 ‘사회적·환경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경쟁적인 농업 실현’으로 제시하였음(European Commission 1997).

- 2016년에는 코크 2.0 선언(Cork 2.0 Declaration)을 통해 혁신적이고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EU 농촌개발정책 방향을 표방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음(European Commission 2016).

\* 10대 핵심과제: ① 농촌 번영 추구, ② 농촌 가치사슬 강화, ③ 농촌 생존력과 활력증진 투자, ④ 농촌환경 보전, ⑤ 자연자원 관리, ⑥ 기후변화 대응활동 권장, ⑦ 지식과 혁신 촉진, ⑧ 농촌 거버넌스 강화, ⑨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및 간소화, ⑩ 성과와 책임성 개선

○ 2013년에는 「2014-2020 공동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공동농업정책은 3대 정책 목표로 1) 실행 가능한 식량 생산, 2) 자연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3) 역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제시하였음(European Commission 2013).

- (제1축 정책) 다양한 직불제 시행, 운영방식에 신축성 부여, 목표 구체화를 특징으로 함.

- (제2축 정책) 지식 전파와 혁신, 경쟁력 강화, 식품 공급망 조직 촉진, 생태계 유지 및 복원, 자원 효율성 증대, 사회 통합 등 6가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함.

#### 1.3.4. 스위스

○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2016-2019」에서 농업·농촌 분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9개 분야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음(Swiss Federal Council 2016).

- 농지를 포함한 토양의 보호와 이용에 다기능적 접근을 강조했다. 즉, 토양의 다양한 기능이 지속가능하도록 스마트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음.

- 농업 및 식품산업 정책에는 공급의 안정적 확보, 전통적·동물 친화적·환경 친화적 생산 촉진, 생물다양성의 보존, 미래 경관농업의 보존 및 향상,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사회 전체의 추진 방향 부합 등을 강조했다.

## 2. 새로운 농정비전과 추진 방향

### 2.1. 새로운 농정비전

- 본 연구에서는 농정 여건과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새로운 농정비전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제안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정 추진 방향은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으로 설정함.

### 2.2. 농정 방향

#### 2.2.1.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 경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로운 성장을 추진해야 함.
  - 성장과 경쟁력, 집약화, 전문화를 위한 설계주의 농정은 농가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및 농촌 공동체 약화, 먹거리 불안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농업 실질 생산액, 농가·농업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성장과 소득의 괴리 등 경제적 성과 자체도 미흡했음.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안심·안전·질 높은 먹거리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나 통합적 접근 시스템 부재가 나타나고 있음.
  - 공익직불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2.2.2.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 시장 중심의 새로운 재화·서비스·마케팅·추진체계를 통한 혁신으로 농림식품 부가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함.
  -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시장 개방으로 인한 낮은 가격 경쟁력, 투입재 가격 상승은 농업 소득 감소와 민간 투자 위축을 가져왔음. 이로 인해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인 유입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김홍상 외 2017).
  -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부문의 자본 투입 확대가 어려워 투입 증가를 통한 농업 성장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급 관리, 스마트 농업 확산, 식품산업 활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사람 중심의 혁신이 요구됨.

### 2.2.3.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 농촌을 삶터·쉼터·일터로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 요구됨.
  - 농가 간 불평등 심화, 도농 간 정주여건 격차 심화, 과소화·공동화 등으로 농촌 지역경제·공동체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근교 농촌의 난개발·환경 오염 등으로 농촌다움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과 농촌 주민은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
  - 계획적 농촌공간정책 제도화, 자립적 농촌생활권 구현,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농촌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시키며 포용과 자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2.4. 추진체계 개편

○ 정책 지원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농정의 지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농업·농촌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 통합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을 통해 농정 추진체계를 개편할 것이 요구됨.

○ 이상의 농정 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 2-1>.

**표 2-1** 농정 방향과 정책과제

농정 방향	정책과제	세부과제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공익직불제 전환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 확산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국가단위 계획 수립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자율적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확산 환경·인간·동물 친화적 축산업 육성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급 관리	생산·유통·소비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강화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혁신 성장을 위한 R&D 강화, 스마트 농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 활력 제고	4대 新식품 분야 육성을 통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과 식품산업 상생을 위한 연계 강화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계획적 농촌공간정책 제도화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한 체계적 농촌공간 관리
	자립적 농촌 생활권 구현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농촌 정주생활권 확충 4도3촌 정주수요 대응, 다지역 거주기반 조성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 활동 촉진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농촌의 신성장 동력 창출	주민주도형·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경제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산업 고도화
추진체계 개편	농정의 지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농업·농촌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	
	통합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	

### 2.3.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김홍상 외 2017).
  - 가치의 중심을 ‘생산물’에서 ‘사람’으로 전환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도모함.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정 이념에 경제적 가치 외에도 생태·환경 유지·보호,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시켜야 함.
  - 농정 목표를 농업인 소득 증대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으로 까지 확장시켜 지역 공동체, 복지 및 지역개발, 먹거리 체계 등에 정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농정 대상을 ‘농업과 농업인’ 중심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하여 안전·안심·질 좋은 먹거리, 환경 유지, 농촌다움 등 농업이 지닌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함.
  - 지역별·주체별 특성과 역량이 시의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농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권과 협치 중심의 농정 추진체계로 개편이 요구됨.

그림 2-1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현재 패러다임(As-is)		미래 패러다임(To-be)
가치의 중심	생산물 중심	→	사람 중심
농정 이념	성장·경쟁력·효율 (경제적 가치)	→	지속가능성·다기가능성 (다원적 가치)
농정 목표	경쟁력 있는 농업, 소득증대	+	국민 삶의 질·행복 증진
정책 대상	농업과 농업인 중심	→	농업, 먹거리, 농촌, 국민, 미래세대
추진 방식	중앙정부 설계주의	→	지자체와 민간 참여, 분권과 협치

자료: 김홍상 외(2017)를 수정·보완함.

## 제3장

# 세부 정책과제





# 3

## 세부 정책과제

### 1.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 1.1. 공익직불제 전환

##### 1.1.1.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

가) 배경

- 농업 부문 직불제 도입(1997년) 이후 농업경영안정 및 소득지지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쌀에 지원 편중, 환경·생태·경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제고 기여에는 미흡
- 직불제를 소득 손실보전 방식에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증진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농정의 핵심 수단으로 확대 필요

○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에 대응하여 감축대상보조(AMS)의 축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공익증진 지원(허용보조)으로의 전환 확대를 추진

나) 세부 정책 방안

○ 농업예산에서 직불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품목연계 직불제 체계를 생산비연계 직불제 체계로 전환

- 기존 직불제는 소득손실 보전방식으로 쌀에 집중되어 논·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농지관리지불 방식으로 개편하여 품목 간 형평성 확보와 농업자원의 효과적 관리 등 농업의 공익 증진 역할 제고

○ 농가(경영체) 단위 지불방식 도입으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직불금 지원의 대규모 농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농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농가(경영체) 단위 지불 방식을 강화
- 공익 증진 기여에는 농지규모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역할도 크다는 점에서 인적지불의 의미를 부여

○ 교차준수요건 재정립으로 농업·농촌 공익 증진 성과 제고

- 공익 증진 기여 보상 방식의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수용 가능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익 증진 의무 부여를 강화
- 농가의 교차준수요건 이행 모니터링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직불청(혹은 지방농정국)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충
  - 농업·농촌이 보유한 환경·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농촌지역사회 유지 및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선택형 직불 확충

### 1.1.2. 중소농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 가) 배경

- 농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농의 경우, 농산물 시장경쟁 심화와 가격 변동성 증가에 따른 경영위험 노출 등 큰 어려움에 직면
- 한편, 각종 보조 지원은 영농규모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대규모 농가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농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
- 중소농의 생산 및 투자의욕 저하는 농가의 어려움은 물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영안정지원제도 강화 필요

#### 나) 세부 정책 방안

- 영농규모 위주에서 농가 특성별 차별화 방식으로 정부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중소농에 대한 보조 지원을 확대
  - 대규모 농가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자기 책임하에 영농할 수 있도록 유도
  - 중소농은 각종 보조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안정 지원
  - 기업농은 정부 지원보다는 민간투자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

- 중소농가의 위험관리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농업 재해위험의 대규모화·다양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장치를 확충
  - 대규모 재해, 병해충 등 다양한 재해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확충 및 합리적 손해사정 등으로 농가의 보험가입률 제고
  -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보조율(50%)을 중소농에게는 상향 조정(60~70%)하여 재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이윤 감소와 그에 따른 농업 소득 감소의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직불금 등 소득보전 지원 단가 설정 시 경영비 상승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중소농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신보의 보증제도 정비
  - 중소농은 자산규모가 적어 담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액보증 확대, 부분보증비율 확대 조정 등을 통해 중소농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 1.2.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1.2.1.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국가 단위 계획 수립

#### 가) 배경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농식품 안전 사건·사고, 국민 식생활·영양 불균형 등 관련 사회적 비용 지속 발생

- 먹거리 관련 다양한 정책이 다수 소관부처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국가 통합 먹거리 계획 및 비전에 기반한 부처 간, 정책 간 연계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곤란

#### 나) 세부 정책 방안

-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계획 마련
  -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부처 통합계획 수립
  - 건강한(안전·영양·식생활), 누구나 누리는(접근성·공공성), 생태 친화적(환경·지속가능), 더불어 사는(지역순환, 공동체) 먹거리 실현을 통한 국가 먹거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추진
-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 전 과정 통합적 접근, 먹거리 종합계획 지속 추진 보장
  - 국가 먹거리 정책 이념 제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부처 간 정책 연계, 민관 거버넌스 수립·운영 근거 제공
- 부처 간 연계,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수립
  -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 ‘국가 먹거리 위원회’ 마련
  -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을 통한 위원회 운영 실효성 확보
  -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논의 및 계획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 부여

-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정책 비전·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제도 강화
  -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해 저소득·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꾸러미 사업과 같은 다양한 식품 지원 제도 도입 및 확대
  - 국민에게 양질의 먹거리 안정적 공급, 지역 먹거리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공공 부문 급식 식재료 안정 공급 체계 수립
  - 생산단계 먹거리 위해요소 관리 강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1.2.2.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 확산

#### 가) 배경

-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안전성 제고 및 지역 순환경제 구축 등 농촌지역 중소·고령농 대책으로 로컬푸드를 기초로 한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이 제기됨.
    - 로컬푸드는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전통 식문화 복원 등을 통해 지역에서 농업인의 자존감 상승, 복지 향상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sup>6)</sup>
- \* 2018년 조사(10점 척도): 출하 생산자의 자존감 상승(8.02점), 생산자의 소비자 행동 이해 정도 향상(8.14점), 복합경영 전환 생산자 증가(7.71점)<sup>7)</sup>

#### 나) 세부 정책 방안

- 지역 단위 푸드플랜으로 먹거리 문화, 생산의 다양성, 가공·물류 인프라 등 농업생산, 농산물유통, 농촌개발 사업을 결합하는 농촌융복합사업으로 확대 추진
  - 지자체는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통합적 지원(로컬푸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 내 먹거리 정책을 지역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주민자치 실현)

<sup>6)</sup> 정은미 외. 2016. pp.102-103.

<sup>7)</sup> 정은미 외. 2018.

- 지역 푸드플랜은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관계 형성과 소통 및 상품의 지역성 발휘 등을 통한 먹거리 통합 시스템 구축이 목적
  - 생산자의 조직화와 실무 역량의 강화, 즉 조직화나 상품화의 경험이 없는 중소농, 고령농에 품목과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생산 기획과 실무 등의 지원이 필요(중간지원조직 활용)<sup>8)</sup>
  - 소규모 농산가공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적극 장려하고, 지자체는 가공시설과 기술을 지원(「식품위생법」의 특례 조항 활용)<sup>9)</sup>
  - 최소 비용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PLS, 제초제 금지 조항 등 출하자 자체 규칙 제정 및 자율 검사 등 자율관리 시스템이 요구됨.
  
- 로컬푸드를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고 실행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립<sup>10)</sup>
  - 지자체는 먹거리 공공시장(학교, 어린이집, 복지급식, 단체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먹거리 체계의 이해를 위한 식생활·식문화 교육 및 체험·관광을 연계

---

8) 정은미 외. 2016. pp.146-147.

9) 정은미 외. 2016. pp.159-160; 정은미 외. 2012. p.181.

10) 정은미 외. 2016. pp.146-147.

### 1.3.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 1.3.1. 자율적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확산

##### 가) 배경

###### ○ 농업환경보전 및 개선의 필요성

- 양분과잉(OECD 회원국 최고 수준), 토양침식,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민원, 비점오염관리, 기후변화 대응 강화, 미세먼지 대응, 경관 개선, 영농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사항 존재
- 비용 효과적 농업환경정책 연구 및 설계, 관련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정

##### 나) 세부 정책 방안

###### ○ 소득보전형 기본직불제와 더불어 환경보전형 부가직불제를 도입

- 기존 공익형 직불제(친환경, 경관보전, 조건불리)를 확장하여 환경보전형(가칭, 토양보전·용수보전·대기보전·농촌생태계 등) 부가직불제로 통합
- 추가 이행사항 마련 및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교차준수(cross-compliance)에 추가적 이행조건 제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행보다는 하향식 구조, 중앙정부 주도

\* 전체 직불금(쌀소득보전, 밭농업, 경영이양,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피해보전 총 1,512,152백만 원) 대비 공익형 직불금(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총 46,466백만 원) 비중은 3.07% 수준으로 미미(농림축산식품부 2019a)

######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중심 친환경농업 정책 외연 확장

- 기존 정책은 친환경농업을 '인증농업'으로 인식하도록 제도·사업 설계(예, 친환경농어업법은 인증농업 중심으로 법령 구성). 그러나 인증전환 성과는

주춤세 → 비인증농업인 대상 환경보전 정책수단 필요

- 이행 협약(contract)에 기초한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발굴 활동까지 포함 가능한 상향식 구조로 구성, 장기적으로 지자체 주도 및 재정 활용 → 농업인·농촌주민 대상 협약은 농식품부가 주도, 환경부의 유사 사업 지원에서의 협약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논의 필요

\* 2019년 현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충남 보령·홍성, 전남 함평, 경북 문경·상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시범사업 수준으로 이해해야 함.

○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법령 정비 및 조직 정비

- 기존 농업환경정책은 생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그러나 농업환경 문제는 투입재-생산-유통-소비 전반의 문제. '농식품환경보전법(가칭)'과 같은 종합적 법령이 필요. 중앙부처의 대응도 '친환경농업과'를 벗어나 농기자재, 축산 등을 아우르는 기구 혹은 조직 필요

○ 한국형 농업환경지표 개발, 정책 모니터링/성과평가에서의 활용 제고

### 1.3.2. 환경·인간·동물 친화적 축산업 육성

#### 가) 배경

- 축산업이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하여 왔지만, 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축산물 안전성 문제(살충제 검출 계란 등), 가축질병 문제, 동물복지 문제 등 축산업에 의한 다양한 문제 발생
-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나) 세부 정책 방안

### ○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 추진<sup>11)</sup>

- 토양 양분 과잉 문제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분관리제 도입
- 자원화 여건 악화(살포지 부족 등) 대비 가축분뇨 처리방법 다양화
- ICT 활용 축산시설 악취모니터링 강화 및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검토
- 가축분뇨의 자원화 통계 구축 및 평가 체계 마련
- 북한 농경지 여건과 한반도 축산물 수급을 고려한 대북협력사업 추진

### ○ 예방 중심의 방역 관리

- 축산농가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sup>12)</sup>
- 축산농가의 방역 시설 및 장비 설치를 위한 보조 지원 검토

### ○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sup>13)</sup>

- 잔류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 농산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축산물에 확대 적용
- 가축사육업의 HACCP 적용 단계적 의무화

### ○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sup>14)</sup>

- 강제환우<sup>15)</sup> 금지, 감금틀 사육제한, 사육밀도 조정 등 동물복지 기준 강화

---

11) 김현중 외(2018)를 참고함.

12) 우병준 외(2019)를 참고함.

13) 관계부처 합동(2017)을 참고함.

14) 관계부처 합동(2017)을 참고함.

15) 산란성 재기를 위해 절식, 절수 등을 통한 털갈이 방법을 뜻함(농사로 농업용어사전).

-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 미래지향적 축산업 모델 제시: ICT 활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환경·질병 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축산단지 조성 후 농가 분양<sup>16)</sup>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 농식품부, 환경부(지자체 포함)의 규제정책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축산업 관련 법령(「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규정 보완

---

<sup>16)</sup> 농림축산식품부(2019b)를 참고함.

## 2.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 2.1.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급 관리

#### 2.1.1. 생산·유통·소비 데이터 기반 수급 관리 강화

##### 가) 배경

- 농산물 생산의 계절적 변동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변동성 발생, 농가 소득과 소비자 물가 불안정 야기
- 신속하고 정확한 산지 정보, 소비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급 전망과 이에 근거한 수급 정책 필요
  - 통계청의 생산 통계는 사후적 자료로 선제적 수급 정책에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생산통계의 구축 및 농업관측 강화
  - 생산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수집, 유통·소비 부문의 정보 등을 종합한 관측 사업의 고도화 추진

##### 나) 세부 정책 방안

- 생산 정보의 신속성·정확성 제고를 위한 정보 수집 체계 혁신
  - 농업경영체DB, 보조금 지급자료, 농업재해보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품목별·작형별 과학적인 농가조사 및 연계통계 구축
  - POS<sup>17)</sup> 데이터, 물류 IoT 데이터 등 빅데이터 기반 정보체계 구축

---

<sup>17)</sup> POS(Point of Sale)는 판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판매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함(aT FIS).

- 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작물별·지역별 재배면적 및 작황 데이터 수집 체계 강화
  - 일선 농협 인력 등 산지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배면적·작황 등에 대한 실측 강화
  - 산지기동반의 확대·강화로 신속·정확한 산지 정보 수집(종묘, 육묘, 저장, 지자체 동향 등 정보 수집 영역 확대)
- 소매·외식·식품제조·급식 등 유통 및 소비 정보 수집 강화
- 소비 직전 단계의 유통 정보를 조사·종합함으로써 소비 동향과 수요 변화를 파악
- 전망 모형 고도화, 가치사슬 분석 등으로 수급 정책 지원 강화
- 원예 수급 모형 전문 인력 육성, 인공지능경망 분석 등 다각적인 전망을 통한 수급 및 가격 전망의 정확도 제고
  - 품목별 가치사슬 분석을 바탕으로 품목별 산업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수급 관리 정책 추진

## 2.1.2.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 가) 배경

- 정부는 생산자조직을 통한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생산자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수급 정책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
- 수급을 포함한 품목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조직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EU의 생산자조직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생산자 자율 수급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나) 세부 정책 방안

### ○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육성

- 생산자조직이 수급 및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 개입을 지양하며 정보 제공, 자금 지원 등 생산자조직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는 정책 방향 제시
-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자조직 주도의 수급 관리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로드맵 수립

### ○ 품목별 광역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과 이를 활용한 가치사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주체로 연계
- 광역단위 생산자조직의 참여 농가수, 생산자조직 참여 농가의 생산 비중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생산자조직에 수급조절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생산자조직의 결정에 따라 APC, 도매시장, 기업화된 유통채널 등에 출하 여부, 자조금 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품목별 차별화된 산업구조 개선 전략 수립

- 품목별 가치사슬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발전 전략 및 차별화된 육성 정책 수립
- 품목 조직 결성과 품목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종합한 패키지 지원 계획 수립
-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품목 조직 육성

## 2.2. 스마트농업 확산

### 2.2.1.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 가) 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농업인력의 감소, 편리한 농업 요구, 환경부하 감소 요구, 기후변화 영향 축소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농업의 스마트화가 필요
  - 스마트팜(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의 스마트농업 추진에 대한 비판, 갈등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이 지체되는 문제 심화

#### 나) 세부 정책 방안

- 스마트농업은 데이터 기반이 기초이므로 농사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활용하는 “농산업 빅데이터센터” 도입, 체계적 관리 강화
  - 지역의 특성(노지+축사, 시설원예+축산+노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기상정보, 토양정보, 생육정보 등)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ICT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스마트농업을 범국가적 전진기지로 육성
- 농업 R&D 투자 중 스마트농업·데이터농업 R&D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농고·농대 첨단기술 관련 교육프로그램(교육부 협업) 강화
  - ICT 활용 교육용 스마트팜 시설을 집중 보급, 관련 교육프로그램 확충
  - 연구개발 이후 관련기업의 창업촉진,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혁신생태계를 조성

- 스마트농업은 시설원예, 축산, 노지, 발작물 등에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커넥티드팜(Connected Farm)을 조성하여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보급 확대
  - 기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과 확대를 위한 운영 방안 연구
- 스마트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부처사업으로 연구추진이 필요
  -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처, 교육은 교육부, 에너지는 산업부, 인력육성은 고용노동부, 생산유통 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부처 연계
  - 스마트농업 컨트롤 타워 도입,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후방 산업 연계 방안 등
- 스마트농업의 표준국가로 육성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스마트 농자재 및 관련기술 등에 대한 수출전략을 확산

## 2.2.2. 혁신 성장을 위한 R&D 강화, 스마트 농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가) 배경

- R&D 투자액은 증가했으나 농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목적 지향적인 연구, 창의적 인력 양성이 부족하여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갖기 어려움.
- 민간의 농식품 R&D 투자는 여전히 낮은 편으로, 국가 R&D와 민간 영역의 역할 정립, 민간 R&D 투자 기반 조성 등 필요

나) 세부 정책 방안

- 농림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ICT·BT 융복합 연구개발 투자,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농업인·농촌주민·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농림업인과 기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R&D 추진체계 강화
  - R&D 바우처 활용 및 리빙랩 적용 등 ‘현장문제 해결형’ 과제 기획 및 수행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개방된 미래 지향형 R&D 추진체계 강화
  - 농림식품산업별·기술분야별 전망 및 미래기술 수요 연구, 해외 농림식품 R&D 정책 연구의 정기적 수행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있는 연구개발 사업 발굴·기획
  - 제목과 연구목표만 제시하는 지정공모과제 확대를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연구 수행 지원
- 민간 R&D 투자 확대 환경 조성, 개발 기술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확대
  - 생산자단체 등 민간 수요자가 직접 투자하는 R&D에 정부 자금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고객 수요에 맞는 연구를 유도하고 민간 R&D 투자 활성화
  - 의무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사용 규모 중 ‘조사연구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R&D 투자 유도
  - 우수 특허기술의 기술이전 확대, 농산업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농생명 분야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 확대, 농식품 벤처 지원 확대 등 산업화 확대

## ○ 스마트농업·데이터농업 등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추진

- 일반·전문대학원에 AI·빅데이터·로봇·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농산업과 융복합하는 학과를 개설(석·박사과정 운영)하고, 전임교원 일정 수 이상 확보, 특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해 지원

## 2.3. 식품산업 활력 제고

### 2.3.1. 4대 新식품 분야 육성을 통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 가) 배경

○ 소비자의 식품 소비에서 건강, 편의성, 다양성이 중시되고 윤리적 소비,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새로운 식품 분야의 성장 가능성 대두

- (기능성식품) 고령화 및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트렌드에 따라 성장

\* 생산액: ('14) 1.1조 원 → ('16) 1.5 → ('18) 1.7 (연 12.1%)

- (가정간편식)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섭취·조리가 간편한 식품 성장

\* 생산액: ('14) 2.3조 원 → ('16) 2.7 → ('18) 3.6 (연 11.8%)

- (펫푸드) 반려동물 보유가 크게 늘면서 관련식품 수요는 확대 및 고급화

\*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 ('12) 17.9% → ('15) 21.8 → ('17) 29.4

#### 나) 세부 정책 방안<sup>18)</sup>

○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식품 분야의 기준·표시 마련, R&D 촉진, 공동연계 사업 기반 조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성장 추진

---

<sup>18)</sup> 관계부처 합동(2019) 참고

- 창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기술기반 사업화 활동의 연계 촉진
- (기능성식품) 일반식품도 기능이 증명될 경우 표시 가능('20 시행 예정).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구축 등에 의해 중소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이 분말, 액상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하도록 지원 및 기술전수
  - \* 일본은 2015년 4월 간소화된 기능성표시제도 도입 후 기능성표시식품 매출액이 '15년 446억 엔에서 '18년 1,895억 엔으로 3.2배 증가<sup>19)</sup>
- (간편식)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HMR 제품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 R&D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
  - 수요가 급증하는 밀키트에 대한 기준 마련 등 표시 및 안전 관리 강화
- (펫푸드) 펫푸드 전용 표시기준과 인증제 마련으로 규격을 정비하고, 곤충 등 원료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통한 펫푸드 개발 촉진
  - 가축사료와 다른 반려동물 식품 특성에 맞는 원료·가공·표시기준 등
- (맞춤형·특수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환자식), 대체축산식품, 소재산업 등 육성으로 국민건강 증진(의료비 절감)과 환경보전 및 자원 절약 등 사회 가치 제고
  - 고령식인증제 도입, 맞춤형식품서비스업 활성화(규제개선, 빅데이터 구축)
  - 다양한 학제 및 주체 간 R&D·투자 분야 공동연계사업 기반 조성을 통해 기술기반 혁신적 사업화 촉진

---

<sup>19)</sup> 야노경제연구소(2019) 참고

### 2.3.2. 농업과 식품산업 상생을 위한 연계 강화

#### 가) 배경<sup>20)</sup>

-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세\*이나, 전방산업인 농업성장 견인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 식품·외식산업 규모: ('10) 131.3조 원 → ('15) 192 → ('16) 205.4 → ('17) 218.0

\* 농림업 생산금액: ('10) 47.9조 원 → ('15) 50.8 → ('16) 49.5 → ('17) 50.6

\*\* 원료 농산물의 국산 비중: ('14) 31.3% → ('15) 31.5 → ('16) 31.4 → ('17) 31.4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활한 원료수급 및 공유 가치 창출, 농업계의 소득안정 및 판로 확대 등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간 동반성장 유도

#### 나) 세부 정책 방안<sup>21)</sup>

- 가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인증제 운영·홍보 등을 통해 식품기업 등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활성화 유도

- 지역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를 통한 연계 확대

- 농업과 기업 연계 지원예산 확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신설 등 지역의 상생협력 참여 유인 마련

---

<sup>20)</sup>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음식점 및 주점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참고

<sup>21)</sup> 농림축산식품부(2018) 참고

○ 국산 농산물 사용 식품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충

- (세금부담 완화) 식품제조업체가 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 확대(매출액의 35→40%)  
\*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구입 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 (보증보험 도입) 구매력이 부족한 중소식품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상품 추가 개발 및 확대  
\* 서울보증보험(주) 가입을 통해 업체당 5천만 원 한도의 신용거래 가능,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원료 매입·가공자금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 (기존) 농산물 매입 시로 한정→(개선) 1·2차 가공소재 매입도 포함

○ 국산 가공용 품종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사업 추진

- 식품가공 용도 품종의 개발·보급·재배기술 교육 등의 사업 추진
- 계약재배 시 신제품 개발·홍보(기업), 안정적 생산체계 확충(생산자) 지원

○ 기능성식품 및 생명소재 산업의 국산 대체소재 발굴과 시범단지 사업 추진

-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생명소재 산업의 국산 대체소재 발굴 및 시범단지 조성 지원

○ 식품기업-농업계 상생협력 사례발굴 다양화와 공유가치 창출 활동 발굴

- 중소 식품기업과 농업계, 대기업과 농업계 상생협력 사례발굴 및 홍보
- 농업·농촌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CSV(공유가치창출) 활동' 발굴 및 홍보

### 3.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 3.1. 계획적 농촌공간정책 제도화

##### 3.1.1.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한 체계적 농촌공간 관리

###### 가) 배경

-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아름다운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대
  - 농촌의 난개발 대응 및 다원적 자원의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제도하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 미비
  -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은 '가치가 많다'고 응답(김동원·박혜진 2016)
  - \* '08~'18년까지 322.2km<sup>2</sup>에 달하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
  
- 중장기적 발전 비전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개별 단위사업 추진으로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한 실정
  - 사업의 효과성 저하와 더불어 농촌 공간의 가치 저하 문제 제기

###### 나) 세부 정책 방안

-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담은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
  
- 농촌공간계획의 수단으로 농촌형 토지이용제도 및 농촌협약 추진
  - 농촌 토지이용 및 수요에 적합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 근거 마련
  - 농촌공간계획과 연동하는 농촌협약제도 운용을 통해 국가 농촌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

\* 우선 지역개발예산과 지자체 관련 사업을 매칭하고 향후 농업 분야 예산까지 확대

○ 농촌형 공간계획 수법 개발, 계획 지원체계 및 지원조직 육성

- 농촌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계획 수법 개발
- 지자체의 자립적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지원시스템과 농촌계획 분야 인적자원 교육 및 계획 수립 지원조직 육성

○ 농촌 지자체 대상 농촌공간계획 시범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 농촌공간계획 전면 도입에 앞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합리성, 적합성, 타당성 등을 확보

그림 3-1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안



자료: 저자 작성.

## 3.2. 자립적 농촌생활권 구현

### 3.2.1.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농촌 정주생활권 확충

#### 가) 배경

○ 농촌 내 여전히 서비스 공급이 취약하고 기초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이 다수 분포

\* 농촌 내 취약마을 수: 3,014개(행정리 기준, 전체 농촌마을의 8.2%)<sup>22)</sup>

\*\* 시내버스가 단 한 차례도 다니지 않는 마을 비율: 12.3%(2015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기준)

- 농촌 내에서도 과소화·공동화가 가속화되는 농촌 배후마을의 정주환경 정비 시급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신기술 기반의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농촌생활권의 정주환경 개선에 활용할 필요성 제기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입각하여 농어촌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시범사업 실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b)

\* 삼척시 근덕면(스마트 에너지), 무안군 무안읍(참여형 커뮤니티케어)

- 과기부, 국토부, 복지부 등 부처별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나) 세부 정책 방안

○ 농촌 계층별 중심지 육성과 연계를 통한 촘촘한 3·6·5 생활권\* 구현

\* 3·6·5 생활권-농촌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주생활권 체계 구축(노인·영유아 등 보건·복지(30분)/평생교육, 창업 지원 등(60분)/안전·응급연락체계(5분))

- 농촌 중심지와 마을 간 기능적 연계체계 구축(우수거점-기초거점-작은거점)

---

<sup>22)</sup> 송미령 외(2016) 참조

- \* 우수거점(읍 소재지)-기초생활거점(시·군당 3~4개 생활 중심)-작은거점(면단위 이하 마을)
- 주민의 원활한 이동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 체계화
- 중앙정부(각급 거점조성)와 지자체(배후마을 정비) 농촌개발 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권 구축
- \* 농촌협약(농식품부-지자체)을 통해 부처의 패키지 지원과 지자체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 (재정집행)

○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용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 확대

-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을 통해 의료·주택·교육·교통 등 분야별 신기술 기반 핵심서비스 보급 정책·사업의 농어촌 실증 프로젝트 추진
- \* (예) 5G 핵심서비스 확산 프로젝트('5G+ 전략', 201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a)의 농촌 실증 모델 추진: 농어촌 자율주행 버스 보급, 원격지 디지털 헬스케어(응급의료 시스템 및 원격모니터링), 쌍방향 소통형 교육체계 서비스 실증 프로젝트 등
- \* 스마트빌리지 사업 확대(과기정통부·농림축산식품부)-신기술 기반 농어촌 주거단지 실증·조성
-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다부처 R&D 사업에 농촌 어젠다의 비중을 늘려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 및 R&D 확대
- \* 지역수요맞춤형 R&D(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 사업에서 농촌 정주 환경 개선 및 농어촌 주민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사업 확대

### 3.2.2. 4도3촌 정주수요 대응, 다지역 거주기반 조성

가) 배경

- 지속적인 귀농·귀촌 추세 및 정주·체류·방문을 아우르는 신정주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국민 수요를 반영,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
- 국민들의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서도 농촌의 잠재력이 높아지는 상황

- \* 귀농·귀촌 의향자 중 10년 내 이주 희망 비율(KREI 조사): ('10) 20.1% ⇒ ('18) 27.6%(성주인 외 2019)
- \*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도시민 수 945만 명(송미령 외(2019) 결과를 기반으로 추산)
  - 다양한 농촌 주거 수요(4도3촌, 일시체류 등)를 겨냥한 정책 지원 필요
- \*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준비 도시민의 정책 수요: (1위) 정보 제공(25.3%), (2위) 주거 지원(21.9%)(송미령 외 2019)

## 나) 세부 정책 방안

- 지역 단위 다지역 거주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며, 도시민과 농촌 지역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도·농 파트너십 형성을 중앙 차원에서 지원
  - 기존 귀농인 중심 지원책을 확대, 도시민 이주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빈집 은행 및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재능은행 운영
  - 다지역 거주 플랫폼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현장 중간지원조직 구성·활용
- \* 빈집은행 운영, 지역사회 이주·정착 정보 제공, 새로운 주거 모델 개발·확산 등 역할
- 다지역거주를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주택 조성
  - 지속적인 귀농·귀촌 유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빈집 철거, 재활용 등 마을 단위 생활환경 정비와 도시민 주거공간 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
  - \* '14년 새뜰사업지구인 증평군 죽리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14호를 철거하고 귀농인의 집 4호를 조성: 사업 후 '14년 대비 마을 인구 20명 증가(총 11호 유입)(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8)
  - 농산어촌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조성, 공급
  - \* 기존 귀농인의 집 이외에 '살아보기 체험 주택', '농촌형 임대주택', 다차(러시아)·체재형 시민농원(일본)과 같은 체류형 농원 등 조성

- 사업 확대를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모색

○ 미래 정주수요에 대응한 농어촌형 주거 모델 개발, 보급

- 에너지 자립형 주택 등 미래형 주거 모델 개발·보급
- \* 난방비 부담을 줄인 패시브하우스, 태양열·지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하우스 등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친화형 주택 보급, 확산 추진

### 3.3.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 3.3.1. 사회적 경제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 활동 촉진

##### 가) 배경

○ 농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생활경제 기반 및 지역공동체 활동 침식

- 보건, 교육, 문화, 상업, 교통 등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 대부분에서 시장 위축 및 공공 개입의 한계로 인해 삶의 질 저하
- \* 면 지역에서 시내버스 1일 운행횟수 3회 미만인 마을이 13%, 10회 미만 52%(2015,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시장실패 및 공공 개입 미흡, 농촌 지역사회의 자생적 해결 노력

- 다종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증가
- \* ('18) 사회적 기업 643개, 마을기업 967개, 협동조합 4,000개 등(각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사회적 농업 등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혁신적 사회 서비스 등장

## 나) 세부 정책 방안

### ○ (가칭)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으로 다부처 참여 추진

- 농식품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 전반에서 사회적 경제 지향
- \* 국고보조 정책사업의 시행 주체, 대상, 방식 측면에서 전면적인 검토
- 타 부처와 협력해 농촌 사회적 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 패키지화

### ○ 사회혁신형 농촌 지역사회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농촌 지역공동체 스스로 필요한 복지, 보건, 교육, 교통, 문화 등의 사회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제공하도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획과 실천을 지원
- 주민단체, 협동조합,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이 협력해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 ○ 사회적 농업 확산

- 농업활동을 매개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직업재활,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실천
- \*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 지역 농민, 마을 주민, 요양보호시설,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 등이 협력해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게 농업활동을 매개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협력해 만성정신질환자 2명을 인턴십으로 고용.
- 사회적 농업 중장기 발전 전략하에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수를 늘리고 농촌 지역사회에 협력 구조 형성을 지원

### 3.3.2.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 가) 배경

- 농촌 지역에서 공공적·사회적 활동 분야의 인적 자원 수요 증대
  - 환경, 수자원,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정책 수요가 확대되면서 사업기획, 소통, 조직화에 종사할 활동가 필요
  - \*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례 확산
  
- ‘농촌에서의 삶’을 모색하는 청년층과 꾸준한 귀농·귀촌 추세
  - 귀농·귀촌 가구 대부분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 기회 탐색
  - 진로 및 직업을 농촌에서 탐색하는 도시 청년 등장 및 실험 프로젝트
  - \* 예: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청년허브 ‘벌의벌 이주 ○○’ 프로젝트 등 청년에게 농업, 사회복지, 지역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 및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 등장

#### 나) 세부 정책 방안

- (가칭) 농촌활성화 지원단 채용 및 파견(138개 농촌 시·군당 30여 명)
  - 농촌 시·군에 조직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농촌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에 활동가 인력 채용
  - \* 사례: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 환경·수자원 관리, 농촌문화유산 보전 및 콘텐츠 구축, 평생학습 지원, 농촌 주민 문화활동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 채용하도록 지원
  - \* 사례: 충남의 ‘사회적 경제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

○ (가칭) 농촌 생활돌봄 일자리 사업 추진

- 읍·면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공적부조 대상자 및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생활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크고 작은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조직이 생활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을 기획·운영케 하고, 활동 인력 직접 고용을 지원

### 3.4. 농촌의 신성장동력 창출

#### 3.4.1. 주민주도형·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가) 배경

-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의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 더 나아가 농업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나) 세부 정책 방안

- 농촌주민의 수용성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 국민수용성은 높은 반면, 실제 발전소가 입지하는 농촌지역의 주민수용성은 현저하게 낮은 실정
  - \* 2016년 허가가 반려·보류된 태양광, 풍력 사업의 37.5%가 주민반발에 기인(정성삼·이승문 2018)
  -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도는 낮은 주민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이익공유제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개선, 사업의 지속성 및 재생에너지 확산의 측면에서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증장기 계획 수립

- 현재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농식품부 내 다양한 과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 재생에너지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부재
- 효과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과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부정적 영향 축소 및 긍정적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 재생에너지 증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증장기적 비전과 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및 계획 구축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이익의 지역 환원과 무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방지 및 우량농지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거버넌스 및 계획 수립 필요

○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농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

-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농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 및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3.4.2. 농촌경제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산업 고도화

가) 배경

-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융복합화, 지역 내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다각화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향상, 지역공동체 유지 등 농촌경제와 지역 활성화 모색

나) 세부 정책 방안

○ 지역 단위 가치사슬 고도화

- 지역 자원과 지역특화품목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 창출 강화
- 생산+가공+유통+소비+관광 융복합화와 연계 고도화

○ 지역 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 연구소 등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 경영체 등 주체들 간 휴먼네트워킹 교육프로그램 조성
- 지역 내 혁신 활동과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외 혁신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특화농공단지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자원과 특화농공단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자원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 특화농공단지 혁신 역량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혁신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농공단지의 산업, 문화, 서비스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산업 혁신공간화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의 내실화

- 농촌융복합제품의 안전성 관리와 고품질화 지원 강화
- 판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판로 다변화 지원 강화
- 광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경영체의 현장애로, 경영 안정 등에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기능 확대

## 4. 추진체계 개편

### 4.1. 농정의 지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 가) 배경

- 지방의 다양성, 자율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지방분권이 주요 국정과제로 부각
  - 중앙집권적인 농정 추진체계를 분권화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농정 추진 필요성 부각
  - 재정분권과 더불어 정책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에 농업인 등 농촌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 필요

#### 나) 세부 정책 방안

- 농업·농촌 정책 예산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 개편
  - 지방 이양되는 재정의 농촌 지자체 간 합리적 분배
  - 완전 이양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기획 및 의사결정에 있어 농촌 지자체가 주도하여 포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 \* 예: 농촌 계획협약 제도 도입, 농식품부 정책사업 패키지화 등
  
- 지방농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포괄적 거버넌스 제도화
  - 각종 농정 사업 목적이나 예산 배분 등과 관련해 지역의 농민이나 주민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의 권한은 계획 등에 대한 심의권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어 대표성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대의 기능을 갖는 농업회의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

- 주민이 지방농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역량, 인적 자원 확보
  - 읍·면 단위 주민자치에 기초한 ‘소(小) 지역 계획’제도 시범 도입
  - \*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움직임과 병행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 활용
  - 농정 분야 전문가, 현장 지원 조직, 활동가 양성 및 채용 지원

## 4.2. 농업·농촌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

### 가) 배경

- 농식품 분야(농업·농촌) 재정지출은 농업기반조성, 성장, 분배 등 여러 역할을 위해 꾸준히 확대
  - \* 국가 전체 예산 기준 농림식품 분야 비중: 8.3%(’01)→4.3%(’19) (농림축산식품부 2019a)
- 농업성장의 정체, 고령화 등 농업여건이 변함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융자 제도 및 세제 개편 필요
- 농업·농촌 재정개혁 방향은 직불제 중심의 직접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 융자 사업은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나) 세부 정책 방안

- (유형별 재정 지원)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가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농가 유형별 투융자 체계를 정비하여 재정 지원 효율성 제고
  - 소규모 가족농에게는 소액 정책자금융자와 직불 방식의 보조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규모화된 전업농가는 대규모 보증 및 융자, 기업농 및 농업법인은 투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 (포용금융) 농가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농업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접근성 제고로 농업 부문 포용적 금융 확대
  - (진입장벽)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농업 부문 진입장벽의 해소로 담보능력이 소진된 가족농, 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 등에 금융 지원
  - (재기) 국내경기하락 영향으로 유입된 귀농, 귀촌 대상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재해, 가격폭락 등 경영위험 피해를 입은 경영회생 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sup>23)</sup>
  - (생계 지원) 영세고령농가, 사고로 일시적 영농활동 중단 농가 등에 대한 금융 지원
  
- (공정세제) 농업 부문 공정 세제기반 구축으로 농업·농촌 활력 제고
  - 농업회계기준 정립, 세제 인프라 구축으로 경영 전문화·효율화
  - 대농에게 지원이 편중되는 부가가치세(농기자재) 감세 범위 축소 및 농특 회계 재원으로 편입하여 직불제를 확대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 (농업투융자전달체계) 직접 용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용자사업 컨트롤타워 일원화 추진

### 4.3. 통합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

#### 가) 배경

- 농식품 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정 추진을 위해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구축’사업으로 팜맵\* 구축 완료
  - \* 팜맵: 고해상도 항공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현장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정보를 공간 정보DB로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sup>23)</sup> 지자체 패키지 지원사업 활용(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을 참고할 수 있음.

- 농업·농촌 부문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증대,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지원 가능

나) 세부 정책 방안

- (팜맵 활용 정책고도화) 팜맵을 기반으로 농업기상, 토양분석, 병해충발생정도 등 팜맵 및 팜맵 연계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농업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책 연계

- 국가중점데이터로 팜맵 선정('19. 5.)
- 직불제, 농업정책보험, 농지은행, 농업기술 정책연계를 통해 정책 고도화

- (AgriX, e나라도움 활용 재정지원효율화)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연계 추진

- 직불제 및 재해보험 등 보조금 지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기본의무사항으로 부여하여 경영체 정보 수준을 강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농림사업 신청서식 표준화 및 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기획, 신청, 평가, 집행, 환류 등을 온라인화하여 농업보조금 정상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림사업관리 업무지원시스템

-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과학농정 구현) 팜맵, 농업경영체DB, AgriX, e나라도움 등 농업·농촌 부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기반, 농업경영체, 재정 지원정보 고도화로 과학농정 구현

- 과거 농지에 대한 정보는 작목, 지목, 소유 등에 한정되었다면, 중장기적으로 기후, 병해충 정도, 토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인력, 재정 투입까지 연계된 통합 정보 제공 가능

# 부 록

## 2020년 정책과제 제안(안)

과제명	
1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 확충 방안
2	가축분뇨 자원화 실태 분석과 개선과제
3	3·6·5 생활권 구현을 위한 농촌 중심지 육성 방안
4	미래 정주수요에 대응한 농촌형 주거모델 구축 방안 연구
5	지역사회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방안
6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연구
7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8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9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10	농촌공간계획 시범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방안
11	농업·농촌 재정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12	농업 부문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3	농업환경 기준수준 검토를 통한 부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1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방안
1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확대 방안
16	농림식품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7	국산 반려동물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8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9	농촌주민의 수용성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
21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기반 자율적 수급 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2	다자성양자원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23	2020년 WTO 농업협상 대응 방안 종합연구
24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및 주류화 방안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a. 4. 8.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 \_\_\_\_\_. 2019b. 6. 25. “과기정통부, 지능정보기술로 농어촌 지역 현안 해결 및 생활편의 개선: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 대상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관계부처 합동. 2017.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 \_\_\_\_\_. 2019.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 김동원·박혜진. 2016.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D4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유찬희·임영아·이명기·김덕호·우성휘. 2017.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중·박성진·김태후·강수진. 2018. 『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홍상·김경필·김연중·박대식·박준기·성명환·이제임·국승용·김미복·김용렬·김정섭·김태훈·마상진·민경택·손학기·심재현·이대섭·이명기·이상민·정은미·지인배·채광석·최병옥·황운재·김덕호·김현중·박성진·박지연·서대석·엄진영·유찬희·이상현·임영아·조성주·최용호·허정희·박혜진·우성휘. 2017.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_\_\_\_\_. 각 연도.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 \_\_\_\_\_. 2018. 『2018~202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 \_\_\_\_\_. 2019a.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_\_\_\_\_. 2019b. 6. 28.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3개소 선정.”
- 성주인·심재현·서형주. 2019. “포용사회를 향한 새로운 도전, ‘농촌 유토피아’.” 농업전망 2019 발표자료.
- 송미령·조미형·심재현·유은형·김나리. 2016.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정도채·서형주.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야노경제연구소. 2019. “건강식품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
- 우병준·김현중·석준호·김명수. 2019.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김태후. 2018. 10. “농가 유형별 소득 형평성 격차와 과제.” Research Brief 제9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
- 이명기·유찬희·허정희·우성휘. 2017. 『OECD 정책분석틀을 적용한 한국 농식품 분야의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정천섭·정환열·최병옥. 2018.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성삼·이승문. 2018.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은미·김용렬·허주녕.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마상진·민자혜. 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삶의 질: 행복한 농촌을 말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2019.12.2.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제 48호.
- European Commission. 1997. The Cork Declaration.
- \_\_\_\_\_. 2013.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 \_\_\_\_\_. 2016. Cork 2.0 Declaration: A better life for in rural areas.
- Swiss Federal Council.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6-2019.
- USDA. 2018. USDA Strategic Plan FY 2018-2022.
- 農林水産省. 2015. 3.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 (平成27年3月31日 閣議決定)
- \_\_\_\_\_. 2019. 3. 農林水産研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

〈참고 인터넷 사이트〉

- 농사로 농업용어사전. <<http://www.nongsaro.go.kr>>. 검색일: 2019. 12. 3.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9. 10. 1.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9. 11. 29.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9. 11. 21.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9. 11. 21.
- 통계청 농림업생산지수. <<http://kosis.kr>>. 검색일: 2019. 11. 21.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9. 10. 1.
-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9. 12. 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 검색일: 2019. 11. 2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검색일: 2019. 11. 11.
- 한국은행. <<http://bok.or.kr>>. 검색일: 2019. 12. 1.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검색일: 2019. 11. 11.
- 혁신적 포용국가. <<http://www.inclusivekorea.go.kr>>. 검색일: 2019. 12. 15.
- 협동조합. <<http://www.coop.go.kr>>. 검색일: 2019. 11. 11.
- aT FIS. <<https://www.atfis.or.kr/>>. 검색일: 2019. 12. 3.
- OECD Data. <<https://data.oecd.org/agrland/nutrient-balance.htm>>. 검색일: 2019. 11. 30.
- UN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 검색일: 2019. 11. 20.